

데스크칼럼

양동민

정치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6·3 대통령선거를 통해 계엄사태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다.

하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마치 큰 태풍을 대비하듯 긴장감이 역력하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선 벌써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출마자가 거론되고 선거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크게 승리해야만 국정 운영 동력에 지속적인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론에선 지방선거가 집권 1년 뒤 치러지는 만큼 ‘압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전국을 싸울만한 것처럼 내년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 등 기존 텃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해 그 동력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방선거 지형 변화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는, 이른바 개혁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정을 이롭게 될 시장 선거 구도도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예고이기도 하다. 광주시장 후보군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본격적인 선거 전초전에 임하고 있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잇따른 현장 행보로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시장 성과 도출과 홍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기고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는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지난 30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의 정체성을 흐른 PBS(Project-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출연이 과제를 수주해 총당하던 인건비·연구비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직접 수주하지 않더라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주겠다는 취지다.

PBS는 연구자가 연구과제 직접 수주를 통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자의 자율성 향상·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해 1996년 도입됐다.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인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청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보다는 안정적인 연구비 확보에만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꾸준히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오히려 PBS가 시행되기 전인 1980년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국내 최초의 전자전(全電子) 교환기 개발(TDX 개발 프로젝트)은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자립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IT·통신산업의 오늘이 있게 한 단초가 됐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국가 통신망의 근간이자 통신 분야의

‘5극 3특’으로 다시 움직이는 ‘특별광역연합’

민형배 국회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중앙정치에서 활약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체 민생 정책을 실행해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이병훈 전 의원도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계기로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정치지형과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다.

특별자치제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호남권 미래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대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내 ‘이슈’로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특별자치제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단위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으로,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한 채 공동 사무만 별도 구성한 특별자치제 단위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지난달 27일 나주시청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협약을 맺었다. 시·도는 올 연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8월 광주시청에서 현판식을 갖는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조직·재정·연차별 업무계획 등), 초광역 공동사무 및 국가이양사무 발굴, 의회 설치, 규약 제정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전담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하고 광주·전남·나주 3개 지자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계획 수립, 국고 지원, 재정 기반 구축, 정부 정책 수립 및 입법과정 대응에 필요한 사항들은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

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에 발맞춰 공동 행정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동남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연합을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른바,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을 만들어 권역에 포함된 지역의 광역업무를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지방 위기를 타파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지방의 연대’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 사이에는 실현성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권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규모를 키우고 자생력을 확보하자고 의지를 불태웠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안협의체를 꾸려왔지만, 광주·전남 메가시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민선 7기 때 진행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무산, 광주와 전남, 전북 등 3개 시도가 추진한 ‘전라도 통합’도 지난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결국 흐지부지됐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의 승인·고시에 이르기까지는 과제도 산재해 부정적 인식을 짊어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연대’다.

광주의 인구는 140명이 깨졌고, 전남인구도 180만명이 무너진지 오래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호남권의 미래, 지역의 생존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에너지고속도로로 시작되는 전남의 새로운 도약

고속도로로 비유되는 ‘백분망(기간망)’ 수용 용량을 현재 2.4Tbps(초당 테라비트)에서 2030년까지 10Tbps로 4배 이상 확대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으로, 컴퓨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네트워크 혁신과 기술 국산화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다 전해졌다.

국가 정보통신망이 국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 해당한다면 백분망은 주요 고속도로처럼 망의 주축(백본)이 되는 역할로써 대용량 데이터 전송의 기반이 된다.

지금의 AI 기술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트래픽 증가가 통신망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있으나, 로봇·자율주행차 등 산업분야 도입 및 일상 분야를 포함한 인공지능 전환(AIX)이 가속화될 경우 엄청난 트래픽 급증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표적 금융회사는 AI 산업으로 인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2023년 3Twh에서 2030년 652Twh로 8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우리 정부 또한 이르면 2033년 통신량이 2023년의 4~9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백분망 증설을 포함한 네트워크 기술 혁신, 국산화 등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면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AI 연산 작업시 소요되는 GPU 등 컴퓨팅 자원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점진적으로 자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바, 우리에겐 커다란 잊음이 될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금 한쪽은 재생에너지가 남아돌고, 다른 한쪽은 부족하다”며 “송전 인프라 확충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자에 수요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비효율성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서남권 등 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RE100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產地消)’ 실현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증대를 위해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또한 전남·제주 등 남부권에 집중된 태양광·해상풍력 에너지원을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인 에너지 고속도로로 구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2040년까지 인천 앞바다부터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을 잇는 한반도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특히 지역 나아가 국가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사업비만 약 10조~11조원에 달하며, 완공 시점도 2030년 1단계 구간을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가 앞당겨져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서해안을 시작으로 해저 케이블을 통해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HVDC(High-Voltage Direct Current, 초고압 직류송전) 전력망을 확충해 ‘U자형’ 전력 인프라망을 구축한다고 하니, 내심 글로벌 에너지 거점으로서 전남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전남 도민으로서 전남에서 시작된 햇빛연금, 바람연금 또한 머지않아 국민주권시대가 실현되는 시발점이 되리란 희망과 자부심에 사뭇 설레임이인다.

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측 측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했다.

오본기 내·외의 소화 및 확산 방지 설비와 시스템 역시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았다.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일부 직원들에게 형식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결국 ‘전부터 그랬는데. 괜찮겠지’ 등의 안전불감증 이 대형 화재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1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소한 사고가 먼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을 이번 화재에 적용하면 큰 아쉬움이 남는다.

화재 발생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점검과 대응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한다.

앞으로 안전 부주의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대형 화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

OPINION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사설

세계양궁대회 전 세계 광주 알리는 계기되길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지난 5일 광주에서 개막했다. ‘평화의 올림’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세계 76개국 73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오는 12일까지 8일간 열린다.

단일 종목 국제대회중 최대 규모로 리커브와 컴파운드 2개 종목에 개인전·단체전·혼성 단체전 등 총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1931년 첫 대회 이후 90여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5년 서울, 2009년 울산에 이어 이번 광주에서 세 번째로 대회를 개최한다.

세계 최초로 결승전 기간을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려 운영한데다 결승전 장소가 5·18민주광장이어서 5월 광주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 대회 참가를 위해 입국한 선수단의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에 전시어지 데스크를 설치했고, 항공 일정에 맞춰 인천~광주전용버스를 운영했고 대회기간 연습장~경기장~숙소를 오가는 대형버스 3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광주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서는 광주국제양궁장, 5·18민주광장,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광주 관광 DRT도 운행하고 있다.

선수단에 균형 잡힌 식사와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9개 호텔 800여 객실을 확보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 선수·임원단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경비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자원봉사자 302명과 시민서포터즈 3200여명은 이 기간 운영·안전·통역·응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각 국 선수단에게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세번째 열리는 이번 국제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글로벌 도시 광주를 가늠해보는 시험대다.

이것만큼 광주의 위상을 확인하고 좋은 이미지를 각인 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대회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이번 대회가 전 세계에 광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금타 광주공장 생산 재개··화재 안전 기하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내달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화재 발생 5개월만으로 화재 피해가 없는 1공장 전체와 2공장 검사·출하 공정 구간을 활용해 타이어 생산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1공장에서는 반제품을 결합하는 성형공정과 타이어 형태로 만드는 가류공정이 진행되는데 반제품을 만드는 설비만 추가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고무를 이용해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고무를 제조하는 정련공정은 화재로 100% 소실된 만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등에서 고무를 수입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 생산 이후 공정은 2공장 중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검사, 선별, 출하 공정 등을 거치면 완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고 한다.

하루 1000본 생산을 시작으로 연내 일 4000본까지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 내년부터는 하루 6000본, 연 200만본 생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휴직 중이던 광주공장 노동자들도 내달부터 순환근무를 통해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2027년 말까지 연 530만본 생산 공장을 함평빛그린산단에 건설해 이듬해 1월부터 본격 가동기로 해 우려했던 고용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됐다.

문제는 지난 5월 17일 이곳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수사결과 ‘인재’로 밝혀졌다는 데 있다.

실제로 광주경찰은 올해에만 5차례 반복됐던 동일 화재의 재발 방지를 소홀히 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이번 화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임직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광주 연구원이 지난 5월 발간한 ‘제16호 광주정책 포커스’에서 이번 화재로 광주지역 연간 생산액 4500억원 감소, 연간 부가가치는 1551억원 감소, 연간 취업자 수는 2218명이 감소하며 광주의 실질경제성장률은 0.3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다시는 이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8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